

경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락포럼

축

2009년 4월 30일(목) 11:00~14:50 |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충남 성환 소재)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축산물산산업정책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락 포럼 개최 오리산업 발전과 관련, 허심 탄회한 토론의 장 열려...

지난 4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김영만 사무관을 비롯, 국립축산과학원의 가금관련 전문가들과 오리산업 종사자들, 한국오리협회 직원 등 산업관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오리산업 연구방향 설정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도시락포럼을 개최하였다.

사진 · 글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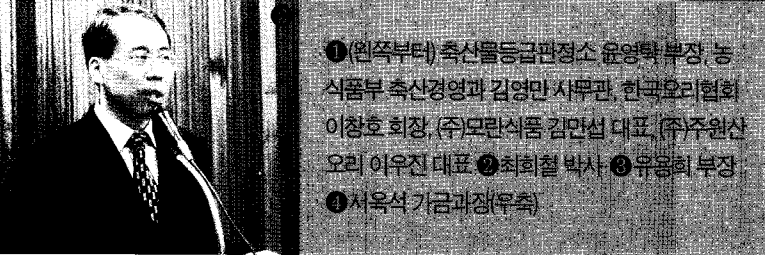
· 일시 : 2009년 4월 30일(목) 11:00~14:50

· 장소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충남 성환 소재)

지난 4월 30일(목),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김영만 사무관을 비롯, 국립축산과학원의 가금관련 전문가들과 오리산업 종사자들, 한국오리협회 직원 등 산업관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오리산업 연구방향 설정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도시락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의 진행을 맡은 축산과학원의 최희철 박사는

“모두 바쁘신 분들이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편하게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축산과학원의 유용희 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리산업은 그 어느 축종보다 비약적 성장을 이룬 산업이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뒷받침 등이 태부족해 질적 성장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의 고견을 통해 오리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듣고자 한다”고 전했다.



① (왼쪽부터) 축산물등급판정소 운영팀 부장,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민 사무관,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주)모란식품 김민섭 대표, (주)주원산 오리 이우진 대표 ② 최희철 박사 ③ 유승희 부장 ④ 서옥석 과장과 장우석



이어지는 오리산업 현황과 당면과제 발표시간을 통해 본회 이창호 회장은 지난해 AI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총 생산액이 약 9천억원을 상회했을 것이라고 오리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현재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의무자조금제 도입, 종오리 DB사업을 육용오리까지 확대, 질병관련 의식개선 등 산재해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뒤이어 오리산업 기술지원에 대한 연구계획에 대해 발표한 서옥석 과장은 현재 오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축산과학원 내 오리연구시설을 증축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사양메뉴얼, 품종개발 등 오리산업에 꼭 필요한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산업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2부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 오리산업 관련 자유토론 현장중계

> 이창호 대한오리협회 부회장 : 오리산업을 보면 10년

전 육계산업 문제가 현재 오리산업의 모습과 같다. 70년대에 육계산업이 수급조절이 안돼 정부에서 손을 놓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이 계열화 사업. 그러다보니 산업이 커지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농가와의 갈등 등 역기능도 상당히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계열화 사업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이 현실이지만 육계산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육계는 GPS를 국내서 생산하고 있지만 자율적인 수급조절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만큼 종오리 GPS 도입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도계생체중이 약 1.5kg 정도로 마진율이 좋지 않은데 타 국가에서는 도계생체중이 2kg 이상이 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다. 오리도 대형품종을 개발하고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현대화자금 등 정부의 농가지원자금은 정작 필요한 영세농가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실상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EVENT in Story

●(주)모란식품 김만섭 대표 : 계열화사업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열업체와 농가간의 상호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오리의 사양관리에서부터 도축 · 유통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또한 몇 년 전부터 오리사육으로 전업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농가소득이 일정수준 보장되고 농가수익성은 앞으로도 전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리고기 수출산업과 관련해서 국내 성수기가 5~8월인 반면 일본의 경우 12~3월까지 성수기라 이 시기에 중국제품이 90~95%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그러다 중국이 AI 상시발생국이 되면서 대일 수출이 금지되고 이를 틈타 한국과 대만이 일본 수출하다 국내 AI 발생되면서 수출이 금지된 것.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성수기 및 비성수기의 시기 등으로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운영탁 부장 : 계열화사업은 어차피 기업이 자신들의 영리 추구를 위해 계속될 것. 소득을 위한 방법을 찾다보면 품질 저하 없이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리는 지금 과거와 비교해 현재 육질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없는 상황이다. 급식이나 균납 문제도 등급상의 기준이 있어야 확대가 가능한 것이다. 우선 기준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격도입 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구매지표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등급제 도입시 등급판정 자체가 국내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원산지 표시제가 필요치 않다는 장점도 있다. 등급제가 도입되면 균납, 급식 등 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출 품질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정우 한국오리협회 사육분과위원장 : 오리농가들 대부분이 어느 누구 못지않게 사육관리에 신경쓰고 있

다. 그러나 타 축종이나 작물 농사하다 오리가 수익성이 좋아 업종을 전환한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고 이러한 사람들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축사를 유지해오고 있다. 물론 현대식 축사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육농가 입장에서 여건이 만만치 않은 점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불이익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그러니 일단 당장은 이러한 하우스 축사를 가설시설물이라도 등록하도록 하여 양성화한 뒤 조금씩이라도 축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 계열업체에서 환경이 열악한 사육농가에는 위탁사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올인 올아웃이 안 되고 있는 사육시스템도 문제.

●이흥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 AI 터졌을 때 가장 문제가 그 불법건축물(하우스 축사)에서 키운 닭 · 오리가 문제였었다. 하우스 사육 양성화는 결코 안 될 말이다. 본인도 닭을 사육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사육자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냉정히 끊을 것은 끊어야 차후에 발생할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더욱이 오리는 단순한 축산물이라기 보다는 기능성 육류 쪽에 가까운 만큼 사육환경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다.

●정정우 한국오리협회 사육분과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가설건축물 대상 농가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집계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현재 오리사육농가 대부분이 하우스 시설이라는 것은 오리관련종사자라면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이를 다 불법시설물이라고 단정지어 버린다면 전부 폐업하고 남는 농가는 몇 없을 것이다.

●이흥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 인 · 허가 문제를 떠나 어느정도 시설이 되어야 이른바 축사라고 명명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라도 보온덮개나 차광막 등 기본적인 필요시설은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모란식품 김만섭 대표 : 이흥재 부회장님 말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 지난해 AI 발생농장에 살처분 문제로 방문하면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농장에서 AI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 **서옥석 축산과학원 기금과장** : 오리가 웰빙·건강식이 미지이므로 생산에 있어서도 그에 합당한 사육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 **채현석 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연구사** : 타 축종은 등급기준이 있어 브랜드 인증할 수 있다. 군납이나 급식도 어느 등급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오리도 자유롭게 납품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도압 시에도 명, 변색, 탈골, 골절 등의 문제가 상당수 발생해 이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등급제가 필요하다.

● **정연우 한국오리협회 충북지회장** : 토종오리가 시장에서 대접을 못받고 있다. 청둥오리 비중은 10~2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는 AI로 지금까지 육용시장은 거의 마비된 상태이다. 특히, 토종오리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 할만한 학술적인 연구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작은 토종오리의 체구를 개량을 통해 크게 육종하고 균일한 품질의 품종이 개발된다면 시장진출도 용이할 뿐 아니라 식품개발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주)주원산오리 이우진 대표** : 육용오리가 다양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 이야기로 그 전까지는 토종오리만 조금 취급했던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하반기부터 오리고기가 웰빙푸드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

토종오리는 전체 오리시장의 7%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시장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리는 약 85~87%가 수직계열화 사업을 이루고 있다. 계열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분담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자와 계열업체, 연구자들이 각각 역

할분담을 통해 제몫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급제 시행건은 오리산업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등급제 시행에는 그에 따르는 생산·유통시설 구비와 소비자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등급제 시행시 원가 상승이 수반되는데 소비자는 저렴한 것을 찾는 것이 문제다. 등급제는 소비자가 원할 때 자연스럽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오리고기는 젊은 층의 소비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설지원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연구원에서 오리와 관련, 좋은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좋은 자료를 언론에 자주 알려 홍보해야 한다.

● **김영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 의무자금은 오리산업이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 **김학영 한국오리협회 전북도지회장** : 현실적인 오리사설계도 제작 및 배포 문제도 시급하다.

● **홍성대 한국오리협회 이사** : 정부가 AI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한 뒤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며 더 이상의 AI 발생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방역에 신경써야 한다.

● **이세중 한국오리협회 계열유통분과위원장** : 오리고기 소비의 쟁점은 바로 맛과 품질.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종사자 모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 **김영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 지난 AI 발생시 표면위로 드러나긴 했지만 토종오리가 산업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토종오리는 주 판매처인 재래시장과 오리농법 전환이 전면금지당한 상황에 판로가 막막하다. 분명 보호가 필요한 축종임이 확실하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산업이다.

● **서옥석 축산과학원 기금과장** :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했지만 오리산업의 문제점과 연구목표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원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